

## 경쟁력 담론과 대학의 위상

이 종 구

성공회대 종교사회학과 교수



세 계화와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는 대학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담론이 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정부에서 곧 발표한다는 '교육개혁'안에 가장 부합된다고 자신하는 개혁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 법대 학부폐지와 로스쿨 설치 문제가 거론된 다음에는 모든 대학의 법대가 하루 아침에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다. 조금 있으면 필자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대체로 학생과 교수의 각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제야 한국의 대학도 국제 경쟁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다.

대학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대학이 정부·기업·언론사로부터 계도를 받아 작성하기 시작하는 집단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내부 구성원들

이 오히려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고 흥겨워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다. 아직 "나의 경쟁상대는 어느 나라 대학교수입니다."하는 광고에 나설 만한 소신파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신입생이 줄어들어도 망하지 않도록 상품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경영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법칙과 대학평가라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교수·학식 비율의 개선, 연구비의 증액, 시설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현실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학장부터 기금 모으기에 나서는 덕분에 동문들의 정리도 돈독해지고, 캠퍼스에 조성하는 리서치파크를 통해 산학협동도 내실있게 진

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재정도 충실해지고 현실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향상되며 교수는 세상물정에도 밝아져 직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세계화의 주요 내용이라고 풀이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지금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다윈니즘적 원리가 과연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모두가 시시한 대학은 망하게 되었으니 정신차리자고 나리법석이다. 실제로 국·공립 대학이나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입학정원만큼 신입생을 채울 수 없게 될지로 모른다는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다. 감성이 발달하고 소비문화에 젖은 신세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 학사관리, 교수 업적관리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인프라스트럭처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량적 지표에 입각한 평가를 중시하는 풍조 가운데서 한정된 등록금·수입을 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한다 보니 무리수가 생기는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수의 업적을 논문 편수로 평가하므로 질적인 통제가 무시되는 부작용

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 수량적 지표가 연구업적을 반영할 수 있으려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학회에서 토론자는 으레 “좋은 논문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로 운을 떼어야 한다. 충실한 반대 토론자가 되려면 버릇없고 점잖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자원배분 경로에서 배제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배짱이 있거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위세가 있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눈감고 있다. 외국의 학회나 잡지에 발표되는 논문을 높게 평가하는 이상한 관행도 세계화라는 시류 속에서 합리화되고 있다. 사실상 국내 대학교수의 주력은 선진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학한 지역에서도 교수자격을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업적평가 절차가 확립된다면 국내 잡지에 발표되는 논문을 스스로 비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국에 있을 때는 평가자의 의견을 신탁처럼 받들던 사람들이 귀국해서는 자기의 글이 평가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중기준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업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선진국 사회에서 확립된 대학의 자치나 엄격한 직업윤리는 잊은 채 외국 학위의 권위와 네트워크만을 내세우다 보니 마케팅에 밝은 사립대 경영자들이 학생 모집 광고에 신규 채용 교수의 명단과 이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을 명기하는 일까지 생겼다.

중·고생 상대의 영수학관이나 속셈학원 광고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기는 하다. 직업적 긍지를 가지고 있는 교수가 이를 본다면 유신정권 시절의 대량 해직이나 투옥사태보다 더 참담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최근에 가장 모범적인 경영합리화 성공 사례로 매스컴에서 주목하는 H대에서는 신규 채용 교수의 심사 기준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의 대학을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매겨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들었다. 이는 물론 개별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증거로서는 손색이 없다. “여기는 신설 대학이니 홍보용으로 외국의 명문 대학 출신교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방침은 이미 흔해 빠진 얘기이다.

학위 논문의 내용은 묻지 않고 브랜드만 따지는 관행은 여러 가지의 효과를 파급시키고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학의 서열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했으므로 이들이 연구업적을 내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본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인격자라는 평가는 받을텐데 구태여 혼자 공부한다고 외톨이가 되어 분위기를 깰 이유가 없다. 대학원생들도 명문대학에 유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장학금도 알선해 주는 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대학원은 유학 대기장소 정도로 여기게 된다. 자연히 의욕이 저하되므로 이는 다시 국내에서 양성된 연구자를 평가절하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면 경쟁력 담론에서 안전한 국·공립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실질적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관료집단의 천국이므로 직선으로 뽑힌 총·학장이 말 안 듣는 주사급 직원 하나도 징계할 수 없고 조교 하나 마음대로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인심 잃을 짓을 할 수 없으니 대과 없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면 대학도 리스트럭처링을 실시해 새로운 연구분야를 수용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독립 소왕국인 학과의 주권을 침해하는 금지된 행위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가만히 있고 정부예산이나 기업체 지원금을 끌어올 로비력이 있는 소수의 상위권 대학만이 돈을 마련해 안전별로 연구소나 협동과정을 자주 만들어 기형적으로 비대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학과가 중심이 된 기존의 대학구조에서 이러한 특수부대들은 예산 따오고 세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얼굴마담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간단하게 말해 교육, 연구, 행정이 통합 조정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몸집을 주체할 수 없는 중풍에 걸려 자연치유력으로 낫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대학 내부에서 볼 때 산·관·학유착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구조개혁 없는 자금지원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대학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성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세계화와 경쟁력 담론이 횡행함으로써 초래되는 가장 우려할 만한 사태는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을 막론하고 기초학문이 경시되는 풍조이다. 당장 용역 수주하는 일에 도움은 안 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지원해야 할 분야가 있게 마련이다. 자연과학 분야의 사정은 잘 몰라 얘기할 수 없지만 소련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국내에서 통역할 사람 하나 구하지 못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총독부 건물은 헐지만 일본사개론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열 명도 양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대학인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실 정책의 입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나 국책은행 조사부가 오히려 대학보다 능률적일 수 있다. 정세진단에서도 국회의원 보좌관의 감각이 정치학자보다 빠를 수 있다. 대학이라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지식을 공급하는 데

있으므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초연할 권리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퇴화되고 망각되거나 아니면 타율에 의한 수술적 개혁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시민사회적 영역이 존중받으려면 대학인 스스로가 직업윤리에 입각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경쟁력이라는 시대의 유행어가 대학이 스스로 궤도수정을 하도록 충격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대학내에서만 통해도 좋으니 파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닮지 않는 행동문화를 펼치자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권위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

---

이종구/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 사회학연구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에서 브레인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성공회대학 종교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현대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대응" 외 다수를 발표했다.